

예멘인

# 제주서 사라진 270명... 뿔뿔이 흩어져 '공장 취업'

전남 조선소서 제주도에 연락 예멘 난민 인력 요청·업무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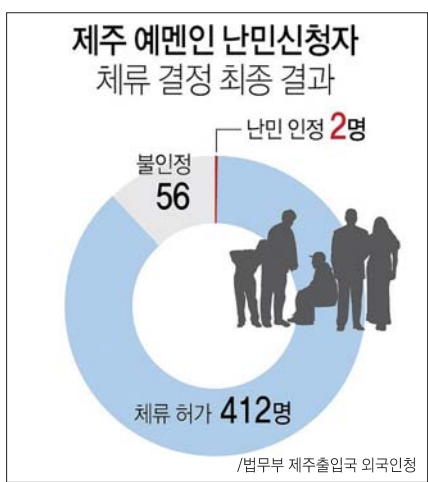
체류지 변경신고, 취업허가 받아 해당 군청선 난민 이주사실 몰라

국내 정착을 위해 전라남도 소재 조선소에서 근무 중인 제주도 예멘 난민 근로자 100여명이 제주지역 시민단체를 통해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륙으로 이동한 난민들은 총 270여명이다. 이들은 전남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무부 산하 제주도 출입국 관리소 난민청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조선소 측에서 제주도 내 시민단체에 먼저 연락해 예멘 난민들의 인력을 요청했으며 이에 응한 난민들이 전남으로 이동해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제주 난민청 관계자는 "고용주와 피고



용주(난민)와의 계약이 끝나면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를 하고 업무에 투입된다"며 "임금수준은 200만원으로 추측되며 비정규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 중 100여명은 제주도에에서 나와 현재 전남의 대형 조선업체 협력업체 등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은 해당 조선소의 30여개의 협력사에서 2~3명씩 소수로 고용한 것으로



법질서 준수 서약하는 국내 인도적 체류 예멘인. /연합뉴스

알려졌다. 제주 난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내륙으로 이동한 난민들은 전남 지역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포함해 총 270여명이다. 서울 경기 지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이동한 난민들도 있으며, 주로 제조업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난민근로자들은 난민 심사 결과 후 내륙으로 이동해 모두 정상적인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난민들의 이탈을 막을 뚜렷한 방안도 없는 상태다.

현재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멘토링 시스템 등을 통해 이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에 들어온 500명이 넘는 예멘인 중 481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최종난민 심사 결과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난민 인정 2명, 단순 불인정 56명,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했을 때 이뤄지는 직권종료는 14명으로 결정됐다.

해당 조선소 관계자는 "일감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예멘 난민들에게 함께 근무할 것을 요청하게 됐다"며 "지난 몇년 간의 조선업체 불황으로 일감이 줄어 기존 인력들은 상당수가 타 지역으로 이동해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따숨소에서 버스 기다리세요"

서울 낮기온이 영하권에 머문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강남 따숨소'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이고 있다. 강남구는 이날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 91곳에 조립식으로 매 겨울마다 재설치할 수 있는 찬바람 막아 구조물 '강남 따숨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주주권 행사 유력... 내달 초 확정

>> 1면 '한진에 칼 빼든...'서 계속

국민연금에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 7.34%(3대 주주)와 한진 지분 7.41%도 들고 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1대 주주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은 각각 33.35%, 28.9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와의 연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명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는 한진칼 2대 주주로 10.71%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진 지분도 8.03% 보유 중이다.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 주주 총회에서 석태수 대표를 비롯해 조현덕·김종준·윤종호 사외이사 등 등기임원 4명의 임기가 끝난다.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조양호 이사와 한 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돼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수탁자책임위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과 총수 일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사들에 대한 재선임 반대결론 등 주주권행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재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우려의 시선

한편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권 유지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이 같은 움직임에 국내 기업들이 금융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진칼을 노리는 사모펀드인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10.71% 보유 중이다. 여기에 한진칼 지분은 7.34%를 보유한 국민연금까지 가세할 경우 경제계의 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쌈짓돈으로 모인 국민연금이 일개 사모펀드의 이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의거해, 과도하게 경영활동에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행동주의 펀드는 주로 자사주 매입, 배당 등 주식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만 극대화하려고 한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장기적 성장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성운·김희주 기자 hj89@

## 두둑한 퇴직금에... 금융권 '희망퇴직' 몰려

우리, 대상자 500명 중 400명 신청 KB, 특별퇴직금 3억~4억 지급예정

KB·신한·우리·하나 4대 시중은행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문제 '도마위'

주요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우리은행은 물론 KB국민은행도 올해 희망퇴직으로 400명 이상이 집을 챙길 전망이다.

희망퇴직 대상 확대와 이에 따른 보상 이후하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권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노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희망대상 대상자 500명 가운데 400여명이 신청했다. 전체 대상자 대비 신청자 비율이 80%에 달해 시중은행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지난 2017년 희망퇴직을 신청한 1000여명보다는 적지만 당시 우리은행의 실적 개선 등으로 특별퇴직금이 다른 시중은행 수준이어서 신청자가 몰린 점을 감

안하면 올해 희망퇴직자 또한 적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4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전체 1만7600여명 가운데 2100여명이 대상이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최소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 3억~4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 가운데 40% 안팎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과거 은행권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대폭적인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비정규직 제로'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KB국민은행은 전체 2만2768명 중 비정규직이 26.5%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은 전체 1만

7406명 중 25.9%가, 우리은행은 전체 직원 중 24.4%가 여전히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국감 자료에 대해 은행권 내 비정규직의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만든 자료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행권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가장 그 비율이 낮은 업종이다"며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의 경우 은행 내 청원경찰과 경비, 기사 등 용역업체 직원까지 통계에 포함해 숫자를 늘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은행에 남아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자 중 재채용 된 사람이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전문 변호사·세무사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또한 "은행권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진행해 왔다"며 "오히려 현재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과 본래 정규직이었던 직원들의 처우 격차 문제가 불거지며 노동자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민영 수습기자 hong93@

## "백년가계만을 위한 별도방안 없어"

>> 1면 '백년가계 을지OB...'서 계속

하지만 을지OB베어의 경우 주변의 또다른 '로 호프'가 사업 확장을 위해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백년가계로 선정된 곳에 대해선 금융지원, 홍보 등의 정책적 지원만 가능하다"면서 "상가의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대응은 앞서 법무부가 개정, 시행에 들어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가능하지만 백년가계만을 위한 별도의 방안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 법무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5년이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또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현재의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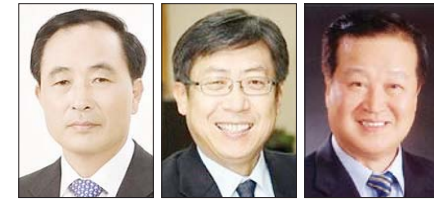
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달 초 입법예고한 상태다.

퇴근 후 노가리 골목을 종종 이용한다는 직장인 이모씨는 "장사가 좀 된다고 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거나 아예 본인이 장사하기 위해 가게를 비워우라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보고, 듣고 했는데 수십년간 자리를 지켰던 가게도 젠트리피케이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서울만해도 서촌, 북촌, 홍대, 경리단길, 망리단길, 대학로, 성수동, 연남동 등이 특히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임차인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극심한 곳으로 꼽힌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총 81곳의 백년가계를 선정, 발표할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남영우 박재식 한이헌

## 저축銀중앙회장 최종후보에 남영우·박재식·한이헌 추천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종후보에 남영우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한이헌 전 국회위원 등 3명이 모두 올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6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인터뷰를 통해 최종 후보 3명을 모두 추천했다고 밝혔다.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오는 21일 진행된다. 중앙회 회원사(79개사) 과반 참석에, 참석 회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회장으로 뽑힌다. /홍민영 수습기자